

시론

새 정부 첫 조각을 점검한다

검증 안된 내각, 믿음 줄 수 있나

김형완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어두운 권력 담합 막고

투명한 국가운영 확보 위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총리서리체제'라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리서리체제는 김대중 정권의 앞날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안이자, 현재의 정치 지형을 압축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이런 파행의 배경에는 물론 대선 이후 계파간의 복잡한 이해에 따라 분열의 심각한 위기로 치달던 한나라당의 당내부 문제가 걸려 있다. 한나라당은 적법절차에 따라 인준을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원내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백지투표'나 '집단지행'이나 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대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문제와는 별개로 반대 시 쟁과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과연 김종필 씨가 새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인 임무, 이를테면 만민한 부정부패의 척결이나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의 개혁,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권력의 착근이라는 일련의 개혁과제를 수행하는데 부응하는 합당한

인물인가라는 문제이다. 자민련과의 연합에 의한 정권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여전히 정국 동요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더구나 과거의 행적이나 경력에 비추어 새 정부에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인사들이 적지 않게 내각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는 새 정부의 총체적인 인사파행으로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투명한 인사의 중요성

김대중 정권은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사청문회를 첫 조각부터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내각 인선이 과거와 같이 국민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게 되었다. 인사는 정파간의 이해에 중심해서 적당히 권력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인사청문회와 같은 공정한 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인사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개적 검증절차

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내각 인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데도 실패하였다. 인사청문회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국정 담당자를 고르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검증해서 그 실력과 파행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에 관한 한 김영삼정권으로부터 뼈저린 경험을 겪은 바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우 권력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를 헌정헌법상 표상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이 국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도의적인 채 인사에 관하여 이전 시기와 뚜렷한 차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이번 내각은 전체적으로 새 정부가 표방했던 참신성과 도덕성, 전문성과 개혁성이라는 기준에 미

치지 못했다든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미달의 정권 교체

김종필씨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민주주의의 지체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정치행보를 볼 때 기득권의 이해만을 충실히 대변해 왔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그 자신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50년만의 정권교체에 의한 새 정부의 내각 수반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경제부처 역시 예상되는 기득권의 완강한 저항을 딛고 금융개혁과 재벌개혁, 노사개혁 등 개혁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절대적 임무의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물이 발탁되지 않았다.

또한 과거 냉전적인 대외상황에서 정보기관에 복속하며 대북업무에 종사했던 인사가 기용된 동일부의 인사도 납득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도 단지 정파간의 권력배

분 차원에서 등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하자

고위공직자 인사에서의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단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인사권을 놓고 남용되는 권력의 독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고위공직자 임명에서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6년 당시 국민회의, 자민련에 의해서도 법률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안이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도 지난 2월 이에 관한 입법안을 국회에 청원 접수시킨 바 있다. 참여연대의 입법내용을 보면 총리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헌법체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단순히 찬반만을 묻는 현행 절차를 고쳐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고, 장 차관, 안기부장, 검찰청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고위공직자중앙인사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력의 집중을 막고 투명한 국가운영의 기틀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다.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출발이기도 하다. '인사는 만사'를 내세우던 김영삼 정권이 결국 '인사가 망사'가 되면서 실패하고 만사에는 김대중 정부에게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사설

위기의 한국호, 진통제론 안된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온 당리당락 차원에서의 구태연한 모습을 뒤로하고 한시적으로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오늘 임시국회가 정상화된다.

이와같은 정치권의 변화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수위가 그만큼 구체적이고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말부터 겪어 온 일련의 경제위기는 말 그대로 '국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위기감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은 실물경제의 파탄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처음으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정치권을 실망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신정부의 경제해결 능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열린 경제 각료 회의는 논의의 주제와 수위에 따라 신정부의 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보다는 강변과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회차원에서의 배려, 재벌에 대한 개혁조치, 대외신인 확보 등등 당위는 있으나 정책방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전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일례로 일정 부분의 실업수당 정책은 고등스러운 환자에게 진통제만을 투여하는 미봉책일 뿐이지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아니라는 말이다.

말뿐인 취업대책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한 일부 제도의 개편보다는 신인도 상상을 위한 경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외국투자가들이 보았을 때 투명한 경영과 재무구조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각 기업의 체질을 변화해야만 한다.

현시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 일각에선 IMF 관리체제 이후 또 한 번의 경제 위기상황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강변뿐인 정책과 당리당락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권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출범 당시 선한 '착지'만 강한 정부의 모습이 절실한 시기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은 필요없다. 6월의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는 일부 구태연한 모습은 한국호의 공멸만을 야기할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시봉

냉철하게 개혁을 보는 눈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마다 빠지지 않고 게재되는 안기부의 '복종조작' 사건에서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과거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왜곡되었던 진실을 비로소 민중을 향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민중과 함께 하자며 민주화를 부르짖었고 경직된 사회현상을 통렬하게 비판해 온 DJ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던 부조리들이 고쳐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췌부터 그가 펼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에서 우리는 당찬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당장 민주주의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의 개혁이나 사정작업을 보면 통쾌함을 넘어서 열렬하게 조차한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사정은 더하다. 성역중의 성역으로 꼽히던 안기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언론 지상을 장악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또한 DJ에 대해 역대 정권이 가해온 정치 탄압사가 신문의 기획시리즈로 연재되리라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들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끈질긴 것이다. 과거 북풍작업을 주도해 오고 한편으로는 'DJ 죽이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세력이 오히려 권력을 잃은 과거의 정치세력을 죽이려 들고 있다. 게다가 DJ '찬양(?)하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예전의



김용운 사회부장

보수세력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건국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기대감 속에서 개혁작업을 시작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참담하기조차 하다. 유례없는 지지도가 최악의 실망으로 변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집권초기 의욕적인 개혁작업이 생색내기에서 그치고 또 다시 보수세력에 기대어 자신의 집권기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 자민련이라는 보수세력이 권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더 냉정한 비판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 맹목적인 지지와 무비판적인 추종이 제 2의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선불리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희망이 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사회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보수세력을 감시해야 할 때다. 이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하나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IMF 체제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개혁 작업을 수행해 갈 지 궁금하다.

PC 통신원

통신서비스가 사치품인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통신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이런 통신이용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인 요금문제가 최근 PC통신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통신이 충분한 사전 예고도 없이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책정해 이용자들에게 비탄을 사고 있는 것이다.

통신 품질도 나쁜 데 거가다 부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보화 촉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는 의견(ID: panavia)과 한국통신이 요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가가치세를 신선했다는 의견이 든다는 의견(ID: 5930564)이 있었다. 또 예전에는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체에서만 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화세가 특수세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통신이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ID: jy486cj)도 있었다.

한국통신은 지난 1월부터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114 안대, 전보요금, PC통신 접속요금 등에 부가가치세(요금의 10%)를 부과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주식 50% 이상을 차지한 대주주가 바로 정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만 탓하지 말고 과정을 살펴본 후 비판을 하라는 의견(ID: Differ)도 있었다. 한편, 한국통신의 한 직원(ID: yvh8833)은 세법은 국회의 제정과 정부의 공포로 시행되는 것이고, 세금은 정부의 수입원이므로 한국통신이 정부에 대항해 받아주는 것 뿐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한국통신의 요금인상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재정난으로 세원발굴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을 것이다. 기왕에 세금을 올리려면 그만큼 서비스 개선에도 충분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 (김수란 기자)



正道경영 · 초우량 LG

세계 초우량으로 극복한다!

세계 초우량을 배워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한국이 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주십시오
LG 21세기 선발대 -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98 LG 21세기 선발대 모집

- 응모분야** ■ 자연과학분야 ■ 사회·문화분야 ■ 교육·예술분야 ■ 경제·기업분야
- 탐방대상** ■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후와 능력을 갖고 있는 각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 IMF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기업)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해외 우수중견기업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 및 CIS, 중남미 등)
■ 탐방지역은 1개 대륙으로 한정함
- 응모대상** ■ 응모분야의 관련분야 국제적이고 체계적인 탐방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세계 초우량 수준의 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응모자격** ■ 95년부터 97년까지의 기준 LG 21세기 선발대 탐방대상자 기금적 중복지 없는 자 (LG 홈페이지 참조: www.lg.co.kr/21c)
- 응모지역** ■ 전국(4년제 대학) 고. 재학생 ■ 해외여행에 걸려 사유가 없는 학생 ■ 탐방활동 지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학생
- 응모인원** ■ 3명 (동일학교 학생으로 구성, 전공 제한 없음)
- 선발인원** ■ 90명 (30명 × 3명/1팀)
- 탐방기간** ■ 2주일(13일 14일) ■ 시기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탐방팀 지원내역** ■ 항공료 · 숙박비 전액 ■ 소정의 연구활동비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소정양식) ■ 탐방계획서 · A4용지 10매 이내 · 탐방 분야 · 목적 · 탐방 일정 · 지역 · 대상 · 탐방 활동 계획
■ 학과장 추천서 ■ 지도교수 탐방계획 지도 확인서 ■ 재학증명서
■ 참가지원서는 각 대학(고) 학생처(과) 및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에서 고부하며 L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복사 사용 가능
■ 1차 심사 통과자 제출서류: 예산서 작성
- 응모기간** ■ 1998년 4월 14일부터 1998년 4월 16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 방문접수: LG 트윈타워 동관 지하 대강당 앞
■ 우편접수: 121-7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번지 LG마포빌딩 2층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선발결과 발표** ■ 1998년 5월 20일 LG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탐방팀 의무사항** ■ 탐방보고서 제출(탐방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각종 자료, 간행물 사진 등 포함 ■ LG 21세기 선발대 행동규정 준수
- 우수 탐방팀 시상** ■ 탐방보고서 심사를 통해 우수 탐방팀 선발 시상
■ 대상: 1팀(부상 300만원) ■ 우수상: 1팀(부상 100만원) ■ 최우수상: 1팀(부상 200만원)
■ 장려상: 1팀(부상 40만원) ■ 최우수상: 100만원 상당의 상품 ■ 특별상: 인터넷 중계 1팀(부상 150만원 상당의 상품)
- 기타** ■ 인터넷 중계 ■ 최우수선발팀 중에서는 신청하여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음
■ LG 홈페이지(www.lg.co.kr/21c)에서 기준 LG 21세기 선발대 자료를 참조할 수 있으며 참가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응모된 탐방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 (Tel: 02-705-3050/2875, Fax: 02-701-1507) (LG, 홈페이지: www.lg.co.kr/21c)

